

■ 남북 관계 및 경협 전망 ■

□ 99년 남북 관계 및 경협 회고

- (정치적인 면) 남북간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으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대북 관계는 북한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 변화로 인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경협) 국내 경기 회복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경수로 사업의 확대로, 남북 경협은 규모와 품목, 건수 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00년도 전망과 과제

- (정치)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한 실리 추구를 위해 북미·북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도 제한적이거나 협조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경협)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수로 본공사와 금강산 사업의 본격적인 투자 단계 진입, 서해안 공단 사업 등이 착공될 경우, 2000년은 남북 경협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 (정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정경분리 원칙의 견지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협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 (민간)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일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대규모 지원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서방 기업과의 경협 관계에 대비해야 할 것임

남북 관계 및 경험 전망

홍 순 직

99년 남북 관계 회고

- (종합 평가) 남북간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으나, 주변국들의 대북 관계는 북한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로의 변화로 인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모색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남한은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속에서 관계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通美封南 원칙 견지로 남북 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북한은 정치·군사 측면에서의 체제 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면서, 미일중 3국간의 대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임
- (대외 관계) 북미 핵·미사일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미 및 북일 관계는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북미) 특히, 금창리 핵 및 베를린 미사일 협상 타결에 이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부분 해제 조치 단행,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이행안의 가동 등으로 94년 10월의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음
 - (북일) 12월에 들어 대북 제재 전면 해제와 양국간 국교 정상화 조기 재개 노력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일 관계 역시 98년 8월의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로 복귀 과정에 있음
- (남북 관계) 민간 차원의 경험과 문화·체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도 남북한 당국자간 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
 - 주변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분위기 및 금강산 유람선의 순항,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도
 - 남북 관계는 서해안 교전 사건과 차관급 회담 결렬 등 북한의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의 견지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임

99년 남북 경험 회고

- (종합 평가) 교역과 투자 면에서 남북 경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 국내 경기 회복과 금강산 관광사업 확대 등으로 규모와 품목, 건수 면에서 IMF 외환 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물론, 경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 (교역) 10월말 현재, 금강산 사업, KEDO의 중유 반출, 경수로 사업 등의 비거래성 반출의 대폭적인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하였음
 - 위탁가공 교역 역시, 섬유류와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부분의 교역 증가로 38.3% 증가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임
- (투자)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대규모 물적·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교역 위주의 소규모 시범적 사업에서 투자 위주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되었음
 -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경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관광객 억류 사건 조기 해결 노력을 통해 남북한 분쟁 해결의 선례와 관광 사업 유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 확인,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상관행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유람선 운항 1년만에 14.3만 명에 달한 금강산사업을 제외한 여타 부분의 투자 사업은 다소 위축되었음

2000년 남북 관계 전망

- (종합 평가) 북한은 경제난 완화를 위한 실리 추구를 위해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서도 제한적이거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북한은 정치·군사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 경제 부문도 대외 원조 확대와 식량 증산 등으로 98년을 기점으로 최악의 바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
 - 특히 99년도 김정일의 현지도 총 67회(98년도 70회) 가운데 경제 부문은 23회(同 8회)로, 경제 부문중에서도 농업 부문이 16회(同 1회)로 큰 비중을 차지
 - 따라서, 북한 당국은 당 창건 55주년(2000. 10. 10)과 김정일 60회 생일(2002. 2. 16)의 기념적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해 경제 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제한적이거나 점진적 개혁·개방으로의 변화하는 모습이 다소 확대될 전망

- (대외 관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통적인 우호·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서방 자본 유치와 북일 청구권 협상 재개를 위해 북미 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 유도에 주력할 것임
 - 북한의 98년 대외 무역 14.4억 달러와 GDP 126억 달러를 감안하건대, 대일 배상금(약 50~100억 달러로 추정)은 북한 경제를 최단기간 내에 회생시킬 수 있는 최선의 유인으로 평가
 - 따라서, 북한은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美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중심의 美의회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우회 유도하고자 노력할 것임(금창리 핵시설 현장 재방문 허용과 미사일 재발사 중단 등에 협조)
 - 그러나, 미대통령 선거에 임박하여 공화당의 대북 강경 기조가 강화되고 일본내 대북 여론 무마 실패로 북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제2의 핵·미사일 사건 도발로 한반도는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음
- (남북 관계) 문화·체육 부문의 교류 확대와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진입 등에 힘입어 남북 관계는 과거보다 실리적·현실 타협적 자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도 집권 중반기를 맞아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속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한의 통미봉남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만약 한미일의 공조 하에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 당국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는 각료급 회담, 특사 및 총리 회담 등의 형식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2000년 남북 경협 전망

- (종합)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정경분리 원칙과 포용정책 추진,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협 자세로의 변화 등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미일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확대로 더욱 늘어날 전망
- (교역 부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조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위탁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 사업이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교역 부문에 있어서는, 단순교역보다는 생산설비 이전을 통한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되며, 정부의 후속 경협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섬유, 가전, 전자 부문 등)

- 특히, 경수로 본공사와 금강산 사업의 본격적인 투자 단계 진입, 서해안 공단사업, 통천 지역의 경공업 단지 등의 착공이 이행될 경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물자와 장비 수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 교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투자 부문) 예정된 금강산 종합개발사업과 경수로 본공사 외에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따르는 외국기업(교포기업)과의 합작투자로 활기를 띠 전망
 - 제2단계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기간(2000~2005. 3)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 및 위락 시설 건설을 위해 약 4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임
 - 서해안 공단사업 역시, 부지 선정 작업만 끝나면 착공 1년만에 200개 경공업 업체가 입주하여 연 30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을 규모로 투자 개발할 계획임
 -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로 외국기업들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교포기업이나 남한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우회 투자가 다소 확대될 전망
 - 2000년 1월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12개업체가 투자 환경 조사차 방북할 예정(별도 유통망이 필요없는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부터 시작하여 통신, 에너지, 인프라, 금융, 광물 개발과 농업 분야로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북한 역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최근에 미국내 재미교포 경제인과 한국기업의 지사 및 상사 관계자들에게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접촉중에 있다고 함

남북 경협외 장애 요인과 활성화 과제

- (장애 요인) 남북 경협외 최대 장애 요인은 높은 물류 비용으로 지적됨
 - 또한, 경제 외적인 사업 환경의 불안정성, 대북 사업의 정보 부족, 북한의 열악한 SOC 현황 등도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전경련 조사 결과)

장애 요인	부문별 세부 장애 사항
높은 물류 비용 (31.5%)	- 운송 비용(68.3%) - 선적 및 하역비용(10.0%) - 기타(3.6%) - 체선 기간(14.6%) - 항구 이용 비용(3.6%)
경제 외적인 불안정성 (24.3%)	- 남북한 공식 채널 부족(53.3%) - 북한내 경제 불안(17.1%) - 대북 포용정책 불확실(21.0%) - 기타(8.6%)
대북 사업 정보 부족 (21.6%)	- 정보제공센터 부재(44.4%) - 정부와 기업간의 모임 부족(25.0%) - 정부 정보 공개 부족(21.3%) - 기타(9.3%)
북한내 SOC 부족 (10.8%)	- 통신망 구축 미비(49.1%)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낙후(20.8%) - 항만 시설 노후화(15.1%) - 전력 부족(12.3%) - 기타(2.8%)
법·제도적 장치 미비 (9.0%)	- 분쟁 해결 방안 부재(32.1%) - 투자 손실 보전 미비(20.2%) - 자금 지원 제도 미비(6.4%) - 기술자 상주 어려움(25.7%) - 인허가 승인 관련(14.7%) - 기타(0.9%)

전경련(1999. 8), 「우리 기업의 대북 사업 어디까지 왔나」, pp. 10~14.

-
- **(활성화 방안) 정부와 기업은 역할 분담을 통해 경협 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함**
 -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정경분리원칙의 견지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협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 민간도 기업간 자율 조정 및 공동 진출로 과당 경쟁과 위협을 분산시키는 한편, 경제성과 수익성 위주의 다양한 경협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정부 과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경협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선, 정부는 남북경협의 목표를 북한의 경제 회복 지원 및 재건 전략을 통한 구매력 향상과 민족경제통합이란 중장기적 관점에 두면서, 인내력을 갖고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여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둘째, 보다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당국자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한 공식 채널을 구축하고 투자보장 및 분쟁조정장치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임. 예컨대,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기금, 각종 협회 기금 등 산업자원부의 무역 지원 관련 기금 일부나 중소기업정책자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매우 절실한 지원책이 될 것임
 - 넷째, 직수송 체계의 조기 개통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역점을 두되, 그 이전 단계로써 남북 교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예컨대 기업의 물류비 일부나 선박 운항사에 대한 보조금,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북한내 SOC 시설의 개선 및 신설 비용 등을 경협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도입해 볼만할 것임
 - 다섯째, 대북 경협 사업에 관한 정보만이라도 정부와 기업, 학계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정보망 센터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구매력이 부족한 북측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금 결제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북 경협을 통한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경협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도입해 볼만할 것임

 - **(민간 과제) 무리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일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대규모 지원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서방 기업과의 경협 관계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
- 우선, 기업들은 단순한 남북 경협이 주체가 아닌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일회성·단견적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을 장기적인 경협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북측 선호 사업 우선) 발굴을 통한 북한의 구매력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둘째,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기업 규모별·업종별·사업별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북한이 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면서 대규모 협력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금력과 정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연계한 공동 진출 방안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며, 정부도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사업 계약서 체결시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성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sjhong@hri.co.kr ☎ 724-4051)